

“아파트 부정 청약 근절” 도 특사경, 단속 나선다

지난해 도내 경쟁률 과열 부작용
부동산 불법투기 집중 수사 필요
집값 담합·질서 교란 행위 등 중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행위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과열 청약 아파트 등에 수사를 벌여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용 기자

도,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컨설팅’ 수행기관 공개 모집

모니터링단,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내달 10일, 노동권익과로 직접 접수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 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 교육 등이 구성됐다.

모니터링단은 지난해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지난해 실시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

경기도 제공

대응하고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예방을 위해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다음달 10일까지 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혜진 기자

도, 아파트 승인 과정 ‘위법 공무원’ 징계 요구

의정부시, 도에 ‘주민감사청구’ 의뢰
환경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등 확인

경기도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호원동 1700여 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하

지 않았는데도 의정부시가 승인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답장이 기안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해당 계획은 담당 주무관이 기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민감사청구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외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등도 있었으나 3개 사항에 대해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도, ‘산업관광’ 통해 생산품 경쟁력 높인다

가공공정 견학·전통수공업 체험 등
지역산업 지원 통해 경제 활력 도모

경기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과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관광은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공장을 방문해 식품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산업관광지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캠퍼 등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인 좋은술 양조장.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삼성이노이션 뮤지엄, 필룩스조명박물관 등 산업관광지 58개소를 발굴했다.

최용훈 도 관광산업과장은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도의 다양한 자원을 확대해 산업관광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세계육상연맹(WA)인증 국제하프대회
www.ggimmarathon.com

NAVER 경기국제하프마라톤

지금부터당신의질주가시작된다

GYEONGGI INTERNATIONAL HALF MARATHON 2023

경기국제하프마라톤

2023. 02. 26. (일)

AM 08:30

수원종합운동장주경기장

부 문
하프 / 10km / 5km (각각출발)

참 가 비
하프 & 10km - 40,000원 / 5km - 30,000원

접수기간
2023년 2월 9일 (목) 24시까지

접 수 처
http://ggimmarathon.com

문 의
사무국 070-4191-9335

경기신문 한국실업육상연맹 경기도육상연맹 수원시육상연맹